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제6차 생태사회포럼 "한국사회 환경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과 무척 친숙한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는 정부도 기업도 친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운하와 원자력이 친환경의 얼굴로 나타나는 현실 앞에 환경운동의 소리는 점점 작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왔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환경운동연합 제6차 생태사회포럼은 한국사회 환경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0년 3월 6일 (토) 10:00-12:00

■ 장소: 환경센터(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사회: 박진희 동국대학교 교수

■ 순서

10:00-10:20 참석자 소개

10:20-11:20 발표

1. 개발독재에서 생태사회적 발전으로: 하나의 생각 **2page**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2. 한국 환경운동의 평가와 전망 **6page**

지운근 (환경운동연합 처장)

3. 녹색정치와 풀뿌리 정치: 국가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회화 **14page**

서영표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부록)

도시와 농촌의 분리에 대한 녹색사회주의의 진단-영국 적-녹 연구그룹의 제안

24page

서영표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11:20-12:00 자유토론

개발독재에서 생태사회적 발전으로: 하나의 생각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1. 이명박 정부: 민주와 생태의 후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민주주의는 어느 정치학자의 예상과 달리 회복하기 힘들만큼 심각하게 후퇴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치적 깃발 아래 4대강이 파헤쳐지고 있고 생태적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민주와 생태의 심각한 후퇴 속에서도 정당정치, 운동정치 모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08년 봄의 촛불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땀과 눈물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태와 민주를 꿈꾸는 사람들은 현재를 어떻게 보고 미래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1980년 '서울의 봄'이 광주의 비극을 넘어 1987년 체제를 낳았듯이, 2008년 봄의 촛불은 1997년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체제를 예비하는 촛불일지도 모른다. 구조변동의 깊은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읽고 새로운 주체와 가치를 찾아 그것을 조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2. 반공반복, 신자유주의, 개발독재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첫째, 이명박 정부는 남북한 분단 구조 속에서 적대적 상호의존의 편익을 누리면서 반공 세력의 지지를 동원하는 정부이다. 이러한 동원전략은 보수적 개신교인 등 전통적인 지지세력을 묶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명박 정부를 반공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어렵지만 반공, 반복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정부임은 분명하다. 수구 집단들과 군수산업, 전쟁 집단 등은 영구 평화가 아니라 전쟁 혹은 전쟁 준비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등 '민주적 신자유주의 정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재벌 중심 자유무역 확대를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이다.¹⁾ '민주적 신자유주의 정부'가 지구 자본주의 시장을 취약한 국민국가의 힘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쓴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가의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개발국가를 넘어 개발독재의 특성을 갖는다. 개발국가란 정치인이나 관료가 주도하여 국가기구들이 경제성장을 최우선의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경제, 산업 정책을 펼치는 국가를 말한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모델은 이러한 개발국가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러한 특성은 형식과 내용, 양과 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1987년 이후 이루어진 민주화의 성과를 후퇴시키면서 개발독재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칼 슈미트에 의하면 "독재는 법률 없는 전권, 법 없는 권력"이다(칼 슈미트, 1996: 163). 권력 없는 법을 법 없는 권력이 지배한다. "입법자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법에 불과하며, 독재자는 구성된 권력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칼 슈미트의 논의는 나치즘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발전하였지만 그의 독재 개념은 '누가 결정하는가?'하는 문제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명박 정부는 법률 없는 전권을

1)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는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함께 추진했다는 점에서 '민주적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부를 수 있다.

제6차 생태사회포럼

여러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재의 특성을 갖고 있다.²⁾ 4대강 사업의 불법, 편법 절차, 문화 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 사장 해임 등은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다. 개발독재란 개발이라는 목표를 위해 법 없는 권력, 결정하는 권력을 실현하는 지배체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 효율이라는 담론을 이용하여 개발독재를 정당화하고 정치를 '권력 없는 입법자의 비효율'로 낙인찍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는 정부를 개발독재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심한 비판이 아닐까? '저탄소 녹색 성장'은 기후변화 등 지구적 생태 위기에 대한 지구자본주의의 대응전략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 전략이 화석연료 중심의 공업 발전 전략에 비해 지구의 환경부하를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개발국가의 성장 모델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을 위한 녹색'은 자연을 도구적 가치로서 착취하는 새로운 상품화 과정이다.

종합하면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으로 수구적이고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개발독재 체제라 볼 수 있다. 이 정부는 독재자의 의지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 절차 등을 무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3. 정치적 기회구조

수구적 신자유주의 개발독재체제는 어떤 정치적 기회구조 아래에 있는가? 정치적 기회구조는 정체(regime)의 개방성, 정치적 세력의 연대의 양과 질 등의 변수로 판별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대의 정체의 개방성은 이전 '민주 정부'에 비해 매우 후퇴했다. 소통의 부재를 비판하는 많은 논란들이 정책 과정의 비민주성, 비개방성을 잘 보여준다.

그러면 정치적 세력의 연대 형태는 어떠한가?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들의 연대는 매우 미약하다. 정당 정치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낮고, 운동 정치 역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생협, 공동체 등 풀뿌리 생태적 대안운동도 생활정치를 정치적 의제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1987년 6월에 이루어진 거대한 사회적 연대의 힘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다양한 이해관심, 다양한 가치, 다양한 주체들이 모두 자신들의 삶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정치적 리더십이나 정치적 열망과 지지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생태적이고 민주적인 연대가 4대강 사업 반대를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운동, 시민운동, 학계, 정당, 그리고 특히 천주교, 불교, 개신교 등 종교계에서 많은 성직자들이 자연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면서 밑으로부터의 생태민주적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작게는 4대강 개발동맹, 크게는 개발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은 생태적 감성과 합리성으로 각성된 풀뿌리 생태 시민들로부터 느리지만 오래 이어지는 연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연대가 4대강 개발동맹 체제의 균열, 개발독재 체제의 균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변형 행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독재 체제는 법을 조롱하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크고 작은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녹색연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4. 개발 담론 대 녹색 담론

이명박 정부의 개발독재는 강하다. 그것은 강제력과 동의를 함께 갖고 있다. 그 헤게모니를 이끄는 동의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 이념을 살펴보자. 첫째, 먹고 살기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경쟁을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경쟁을 시키고 우수한 학생을 많이 만들어야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셋째, 능

2) 이명박 정부의 개발독재가 칼 슈미트가 말하는 주권적 독재 즉 "기존 질서 전체를 그 행동에 따라서 제거해야 할 사태"로 보는 독재 형태는 아니다(172쪽). 이런 사례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6차 생태사회포럼

력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은 정의롭다.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아도 마땅하다. 넷째, 시장과 기업은 효율적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일류기업이 더 많이 나오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다. 다섯째, 국가와 정치는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이다. 규제를 줄이고 기업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일이 국가가 할 일이다. 여섯째, 환경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이다. 일곱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전폭 지원한다. 요약하면 1) 선진화 2) 경쟁 3) 메리트크라시(meritocracy) 4) 시장 효율 5) 국가 비효율 6) 녹색성장 7) 비핵개방 3000 같은 것들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 담론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다른 정치세력들의 담론은 어떤가? 민주당 등 개혁적인 야당들은 복지정책, 북한 정책 등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선진화, 경쟁, 메리트크라시, 시장 효율, 국가 비효율 등의 쟁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진보정당들은 노동계급과 민중의 관점에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모두 강조하고, 메리트크라시와 경쟁을 비판한다. 이들은 국가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전략을 지향한다. 민노당과 같은 옛 진보정당들은 평등,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같은 가치나 정체를 주장하지만 이를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새로운 사회적 힘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녹색 담론은 어떠한가? 녹색 담론 가운데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다. 사회제도 개혁을 통해 환경문제의 점진적 개선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사회구조를 전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서는 급진적 녹색 담론을 살펴보자. 첫째,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기 위해 일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경쟁하는 것보다 협동하는 것이 더 좋다. 만물은 서로 돕는다.³⁾ 셋째,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넷째, 시장과 기업은 사람을 소외시킨다. 다섯째, 국가는 폭력이다. 여섯째, 자연은 삶의 터전이다.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 일곱째 북한과 다른 나라, 세계 모든 사람들은 모두 평화롭게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다.

나는 급진적 녹색 담론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공업, 자본, 국가 중심의 발전체제가 200년 이상 지구를 지배해 왔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균열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급진적 녹색 담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개와 변형, 번역의 과정이 필요하다. 인구의 90%가 도시에 살면서 농촌보다는 도시, 그 가운데에서 수도권에 모여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아파트 가격, 주식 시세에 관심을 집중하는 현실 속에서 급진적 녹색 담론을 지금 여기에서 현실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급자족의 소농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콤문으로 모두 분산하여 국가의 힘을 뺏다는 전략도 그리 설득력이 없다. 원칙은 올바르지만 생태위기와 사회적 배제의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분산을 넘어선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집중화된 물질, 사회경제적 구조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구적 상호의존의 시대에 풀뿌리 콤문으로의 분산 전략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면, 분산 속의 연합, 연합 속의 분산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생태적 어소시에이션의 운동정치라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생태적 어소시에이션의 담론은 무엇인가?

첫째, 사람은 함께 일하면서 즐거움을 누린다. 둘째, 경쟁이나 전쟁보다 협동하고 협력하는 시간이 훨씬 길고 행복하다. 셋째,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 똑 같은 사람이다. 넷째 시장과 기업은 사람들을 너무 과로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쉼 시간, 게으르게 생각할 시간, 운동할 시간, 산책할 시간을 누릴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 다섯째 국가는 기업의 대변인이나 시민을 억압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생물학적 약자와 자연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국가는 전쟁을 준비하는 데 세금과 폭력을 쓰지 말고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고 세계시민을 돕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모든 인간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자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국가와 사람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일곱째 북한을 비롯한 모든 국가와 영구적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러한 녹색 담론 속에 미래가 있다. 이런 상식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과 정책이 나온다.

3) 크로포트킨은 동물 생태학과 인간의 역사를 탐구하면서 상호부조가 진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말한다(크로포트킨, 2005).

5. 생태사회적 발전⁴⁾

녹색담론은 너무 낭만적이고 나이브한 담론이 아닐까? 어찌 이 극심한 세계적 경쟁체제에서 쉬어가면서 일하고, 이웃을 돕고, 전쟁준비도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단 말인가? 일인당 소득 2만불도 제대로 안 되는 나라에서 소득 4만불 되는 나라의 복지와 풍요를 꿈꾸는 것은 올바른가? 경제가 성장해야지 환경도 보호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들이다. 이 통념 가운데에는 진리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의 발전 모델이 사회적 안정감과 생태적 균형을 잃어가면서 과도하게 자연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졌다. 많은 사람들은 밤 늦게까지 회사에 메여 과로로 고통 받거나,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 등으로 불안정한 생활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강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더 많이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대기업 중심의 시스템이 강해질수록 그 시스템의 밖으로 외부화되는 자연과 사람들의 고통은 커진다.⁵⁾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자본 중심의 시스템의 레파토리를 '녹색'으로 변화하고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 더 커지고 유연해질 뿐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개발 시스템을 바꿀 길은 있을까?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다른 나라 사례들을 살펴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를 잘 살펴보는 길이다. 먼저 다른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나라별로 발전 모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영국처럼 경쟁과 시장의 확대를 통해 발전을 추진하는 나라들도 있고, 일본처럼 관료가 중심이 되어 보수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나라도 있다. 반면에 네덜란드, 독일처럼 계급, 집단과의 타협과 협동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회적 복지를 유지하고 생태를 보전하는 복지국가 모델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적 역사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발 시스템을 온존한 채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도 생태적 근대화과 복지를 함께 이루는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아니라 사회와 정치를 바꾸어야만, 다른 발전 모델,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대안적인 발전의 씨앗을 찾아보자. 우리나라에는 지금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동체 등 여러 풀뿌리 조직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전에 주창형 운동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씨앗들은 신자유주의 개발 시스템 대신 생태사회적 발전을 추동하는 선구자들이다. 경쟁보다 협동, 시장과 국가보다 공동체, 도시보다 농촌, 인공보다 자연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씨앗들을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연결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생태사회적 발전 모델에서는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 대신 생태사회적 구조조정을 지향한다. 환경파괴적인 기업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태적이고 사회적인 일자리를 찾도록 산업, 노동정책을 추진한다. 대주주 한 두 사람이 지배하는 기업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유자산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협동조합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협동과 돌봄을 확대하고 환경을 살리고 지키는 다양한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한다. 이러한 씨앗은 이미 우리 사회에 이곳저곳에 퍼져있다. 문제는 이들을 엮을 수 있는 힘과 상상력이다.

4) 생태사회적 발전은 이시재 외(2010)의 연구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생태위기와 사회적 배제를 구조화한 산업근대를 넘어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호혜성을 함께 발전시키는 모델'을 말한다.
5) 물론 도요타의 예에서 보듯이 기업의 시스템도 지나친 경쟁과 효율화는 시스템의 파국을 불러 올 수도 있다.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 부사장의 자살은 시스템 속 인간의 고통의 극한을 보여준다.

6. 미래 만들기

우리 앞에는 크게 세 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 첫째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일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민주주의의 회복은 많은 사람들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회복만으로는 부족하다. 2008년 촛불의 부활은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서서 생태사회적 발전의 주류화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적 신자유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 발전을 추구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세력에 포위되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정치의 미래는 생태위기와 사회적 배제 문제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을 보전하면서 사회적 화해와 협동을 강화하는 발전' 모델 안에 있다.

마지막으로 좁은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틀을 넘어 지구적인 생태평화 연합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문제,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를 대한민국의 틀 안에서 보는 것은 어린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성찰적 이성의 확장을 믿는다면, 보편적인 인류의 평등과 영구평화의 관점에서 생태적 균형과 평화를 재구성해야 한다. 자유로운 개인과 공동체, 어소시에이션들이 전쟁을 스스로 포기하고 영구적인 평화와 지구의 생태적 균형을 위해 협동하는 미래는 가능하다. 전쟁을 하는 시기보다 협동하는 시기가 훨씬 길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만물은 서로 도우면서 살기 때문이다. 싸울 때보다 서로 사랑할 때 더 행복하다.

[참고문헌]

- 이시재 외. 2010a. 『생태사회적 발전을 향하여』. 아르케 (근간).
이시재 외. 2010b. 『생태사회적 발전의 현장을 찾아서』. 아르케 (근간).
칼 슈미트 Carl Schmidt. 김효전 역. 1996. 『독재론: 근대 주권사상의 기원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까지』. 법원사.
크로포트킨. 김영범 역. 2005. 『만물은 서로 돕는다: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르네상스

환경운동의 평가와 전망

지운근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1. 시작하며(평가의 전제)

- 집단적 평가 과정이 아님. 주관적. (평가를 위한 소재)
- 환경운동연합 중심.
- 평가 기간의 설정 : 최근 수년

2. 환경운동의 외부 여건

- 미국발 금융위기의 세계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위기의식 심화
-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강화와 이로 인한 양극화, 사회안전망 취약, 실업 등 서민 경제 피해 가속
- MB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전면집중과 복지 교육 등 필수적인 대사회 예산 대폭 삭감
- MB정부의 방송장악 본격화와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현격히 약화
-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에 따른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심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축소

3. 2009년 주요 환경현안 및 대응

- 4대강 사업
 - MB정부의 무시와 억지 부리기, 말 바꾸기, 왜곡이 갈수록 심화.
 - 4대강 사업은 점점 속도를 내어 진행 중이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이는 운하반대 운동 등 그간의 대응 활동의 성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폭발성 있게 결집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최근 종교계를 중심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환경운동 진영이 적극적으로 결합할 태세이다. 이는 환경운동 진영 스스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 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후퇴

제6차 생태사회포럼

- “저탄소 녹색성장”의 슬로건과 부합하지 않는 기후변화 정책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국제적 네트워크 운동의 강화 및 이를 통한 정책 수정에 집중 : 가시적인 성과 미흡
- 원자력 강화 움직임. 방폐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감소와 대응 활동의 고립화
- 경제위기와 “비즈니스 프렌드리”에 편승한 에너지 정책 후퇴 기도(울산)

○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세종시 수정안 강행 태세

- 정치권의 권력 다툼 및 선거공학적 판단이 주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상황 지속
- 세종시 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진영의 대응 미약

4. 환경운동 평가

○ 취약한 운동기반의 극복, 여전한 과제

-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회원에 기반한 자립재정 구축은 과제로 남아 있음.
 - 서약서 요구 등 프로젝트 여건의 변화에 대한 재정압박과 활동 위축
 - 온라인 공간의 확장에 따라, 시민들의 정보 취득, 의사표현 및 문제제기 수단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변적 시민(환경)운동의 역할 축소, 회원 가입 감소 등 현상 발생
- 회원, 활동가들의 고령화 현상, 20대 청년층이 호감 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 개발 시급
- 시민참여의 부족,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 부족, 시민의 의사결정 부족 : 후원회원이 절대 다수인 회원 성격의 한계 : 광범위한 회원들의 자발적 자원봉사를 견인하지 못하는 운동

○ 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 홍보의 한계

- 블로그 트위터 등의 참여형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매체가 등장하였으나,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운동은 아직 확실히 정착되고 있지 않으며, 대체제로서의 효과도 아직은 미흡하다.
-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에 비해 온라인 활동은 매우 미약한 실정임. (조직 외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파워 블로거는 있으나, 보다 많은 정보와 현장성을 지닌 공식 블로그는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음. 활동가들의 블로그도 숫자적으로 작고 활동도 많지 않음)

○ 운동방식의 변화 및 다양화 매우 부족

- 운동방식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함
- 특히 이슈 대응은 기자회견, 농성, 집회 등 한정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함.
- 언론의 반응에 종속되는 현상 지속
- 상근 활동가 중심의 운동에서 기인한 운동의 관성화

제6차 생태사회포럼

○ 연대의 문제

- 현안에 대해 연대하여 대응 하나, 효율적이지 않음.
- 외형 부풀리기식 연대조직의 구성과 책임의식의 약화
- 연대운동이 시민참여의 장을 확대하고 영향력이 확대하는 장이 되기보다는 소모적 동원을 위한 도구화 되는 경향이 있음.
- 다양한 단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따로 또 같이'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한 문제
- 일부 주도권 다툼

○ 네트워크 운동의 미성숙 혹은 네트워크 체제로의 전환 어려움

- 작지만 다양한 환경운동 단체의 생성, 환경단체 외에서도 다양한 환경운동 전개
- 소규모 풀뿌리 환경단체와의 연대가 주로 집회 시위, 혹은 서명, 연대에 이름 올리기 등으로 제한됨. 소규모 단체에서는 피로감 외에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음.
- 점점 다양해지는 소규모 특정 분야 혹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단체들의 생성에 어울리는 네트워크 체제 필요

○ 환경(시민)운동 진영의 도덕적 문제에 대한 시민의 비판 의식 강화

- 환경연합 등 몇몇 (시민) 환경단체의 회계, 성폭력 등 문제로 인한 시민의 환경운동 단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

○ 시대변화에 따른 적응, 나아가 변화를 주도하여야 하나 현실은 반대

- 환경(시민)운동에 대응하는 상대(정부, 지방정부, 정치권, 기업 등)의 환경운동에 대한 파악과 이에 따른 대응능력은 급속히 성장한 반면 환경운동 진영의 변화는 이에 못 미침.
- 개발 현안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보전을 위한 대안의 제시로 전환하여 프레임을 선점하지 못함

○ 시민 대면접촉의 약화

- 직접적 대면 방식의 주민 접촉 약화 - 서울 특히 심함. 활동가들이 주민을 접촉할 수 있는 장을 잃어버리고 있다. 접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반복되는 경향
- 여주지역의 경우 다수의 주민이 4대강 살리기에 찬성하는 등 환경운동단체에 우호적이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 그러나 환경단체는 주민들과의 대면과 설득 홍보 등을 통한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임. (전국에서 여주로 사람들을 모은다는 그래서 여론을 반전시킨다는 전략은 옳다고 보이나, 직접적 현장이며 그 지역의 주민인 여주시민들의 여론을 반전시키는 부분은 적절한 방안을 만들지 못함)

○ 중요하고 유력한 자원봉사자로서의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 약화

- 전문가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운동, 전문가 그룹과의 소통 문제, 의사결정의 문제

제6차 생태사회포럼

- 4대강 등 국민적 관심이 많거나, 갈등요소가 비교적 적은 분야 외에는 적극적인 전문가들의 참여가 어려운 현실, 소수의 전문가 그룹에 의존
- (무한경쟁 체제의 학계)

○ 국제적 네트워크의 강화

-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적 압력수단 창출
- 쌍방향 네트워크의 강화(일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일방향 네트워크가 많음)

3. 과제(전망)

○ 장기적 비전과 전략 수립 필요

- 대부분의 문제 혹은 극복과제에 대해 환경운동 진영의 임원, 활동가들이 알고 있음.
- 다만 이를 극복하고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의 투자에 인색(혹은 어려움).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 비전의 제시 → 비전을 실현가능하게 하는 지표 개발(기록 문화의 취약함) → 지표에 따른 단기적 중기적 목표 설정(계량화가 가능한) → 실행과 평가 → 모니터링 및 평가 → 피드백 → 수정 →
- 장기과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 조직화

○ 운동양식, 도구의 개발을 위한 집단적(공동) 연구

- 연대, 네트워크 운동의 새로운 양식의 개발 및 적용
- 시민과의 직접적 접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시혜적 접근, 설득형 접촉을 넘어서는 방식
- 선도적 혹은 대안적 운동의 연구, 확산, 적용 노력
- 연구그룹의 조직

○ 전문성 강화

- 활동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의 강화
- 전문가 참여구조의 강화

○ 시민 혹은 회원의 자원봉사 강화

- 다양하고 전문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을 통한 시민 참여 강화
- 자원봉사 그룹의 체계적 조직을 통해 활동가 중심의 운동 탈피
- 상근 체제 경량화를 통한 재정구조 건전화

4. 마치며

- 변하지 않는 해묵은 평가
 - 참고자료 : 2005년 환경운동의 평가와 2006년 방향과 과제(한국환경회의, 2005년 12. 2)
- 왜 바뀌지 않는가?
 - 구체적 통계와 기록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감각적 평가, 활동가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여야 하며, 집단적 평가와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평가와 그에 따른 전망은 비전 혹은 원칙과 단기적 목표가 잘 구분되어야 한다.(현실적으로 당장 적용 가능한 대안과 장기적인 비전은 구분되어야 한다.)
 - 원칙적인 이야기를 나열하거나 구체적 대안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무의미하다. (평가를 통해 개선되지 않고 평가로 끝난다).
- 과학적인 평가와 작지만 실현가능한 대안의 수립, 모니터링을 위한 제안
 - 평가기구를 상설화 하여야 한다.
 - 과학적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는 '기록'을 강화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2005년 시민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 평가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운동 진영의 대응전략에 대한 평가-

오성규 / 환경정의 사무처장

1. 2005년 환경운동 여건

○ 경제위기의 심화와 양극화

-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인 내수부진, 경제위기 기초의 지속 예상
- 경제위기의 원인
 - 급속한 고령화, 가계자산의 지나친 부동산 집중, 심리적 불안상태(한국경제), 양극화
- 규제완화에 대한 집요한 요구
- 경제에 올인 할 것을 요구

○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사회 전반을 규정

- 무한경쟁을 통한 승자독식
 - 경쟁적 토대를 갖지 못한 경제주체들의 생활여건 악화
 - 일부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불균형 심화
 - 경쟁력 없는 개인 역시 도태
- 효율만능
 - 노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기계생산에 대한 의존율 증가
 - 정규직 노동자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속한 증가
- 사회 양극화 심화 및 사회 불안 증가

○ 참여정부 하에서 "환경" 소외

- 참여정부의 국가프로젝트인 국가균형발전의 수단이 공간개발전략
 - 골프장 총수 : 400-500개
 - 수도권 주택개발 총수 : 7000만평, 500만호
 - 수도권 신도시 25개 규모
 - 혁신도시 10-20개 개발 예정
 - 행정수도 2000만평 개발 예정
 - 기업도시 개발시 기업도시 1개당 200만평 이상
 - 경제 자유 구역 3개
 - 지역발전특화특구 100개 이상 신청 예정
-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최근 국가의 최고 슬로건
- '환경비상시국회의' 요구에 대한 무대응

○ 환경과 멀어지는 국민의식

-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심화
 - * 개인적 관심사(2002년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행동, 제일기획 사보)
건강/질병(48.8%), 가정/가족(47.7%), 자녀교육(29.9%), 재산증식(19.4%), 식생활(10.1%), 공해/환경문제(3%)

제6차 생태사회포럼

*관심있는 사회문제(2002년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행동, 제일기획 사보)

교육(33.4%), 범죄/사건/비행(29.5%), 국내정치(27.8%), 주택/토지/부동산(24.5%), 공해/환경오염(13.6%)

- 경제문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반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점점 약화됨

· 10억 모으기(왜곡된 인생이모작 - 부동산 투기)

- 시민들의 수용력 저하

· 환경의식과 소득과의 비례관계

○ 시민환경운동의 위상과 역할 약화

- 사회적 의제 세팅에 관한 주도력 상실

- 운동방식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함 : 이슈중심의 대응, 네거티브

- 취약한 기반 : 세계사적 흐름, 대중매체, 시민들의 당위론적 환경보전주의

- 공동대응(연대) 능력 상실

-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함 : 정파적 태도, 천성산, 중저준위 핵폐기장

-사이버 정치공간 : 조직운동이 아니라 직접 참여운동

※ 시민단체 회원 감소

- 시민환경운동의 민주성과 책임성

- 시민들에 대한 영향력 축소

· 환경비상시국회의VS 성미산 살리기

- 운동전반에 대한 도덕적 비판

○ 각종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가시화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시범사업 6곳 선정

- 지역특화특구 : 이미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 있음

- 핵폐기장, 국립공원 관통도로 등

- 수도권 신도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

- 수도권 광역교통계획(민자도로 포함) 추진

3. 평가 및 과제

○ 2005년, 무기력한 환경운동

- 이렇다 할 활동을 보여주지 못한 한 해

· 조정기, 위기, 새로운 모색기 등으로 표현됨

- 방폐장 선정이 국가적인 현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응 못함

· 사실상 부정선거 감시운동 수준에서 대응

· 명확한 부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화시키지 못함

· 포괄적인 연대를 조직하지 못함

- "황우석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못함

· 돌이켜보면 이미 환경운동진영 내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안

적극적 의지의 결핍

제6차 생태사회포럼

- 환경지킴이로서의 희망을 보여주지 못함
 - 정부, 기업, 시민 등 사회 전반의 환경보전 세력 약화
 - 유일한 환경지킴이 세력으로서 대안적 희망을 조직하지 못함
- 연대(협업)의 실패, 다양성의 제약
- 전환기시대, 기존방식의 운동 실패, 새로운 자기 위상 찾기
 - 시민·환경운동과 시민(사회) 간의 '인식의 괴리'가 너무 커짐
 - 포디즘적 환경운동의 한계와 폐해
 - "대량생산, 대량소비", "표준화"
 - 90년대 중·후반 이후의 환경운동은 그다지 다르지 않은 이념적 지평위에 수많은 조직들이 수평적으로 펼쳐져 각개약진하는 양상
 - 자기색깔을 가지고 대중과 현장에 접근하기보다는 운동규모가 변별의 기준
 - 환경운동의 양적축적 방식
 - 새로운 자기 위상 찾기 필요

녹색정치와 풀뿌리 정치: 국가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회화

서영표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국가와 시장은 우리의 일상 그 자체이다. 우리에게 국가의 제도적 망의 바깥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어떤 물품도 조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의식적으로 국가제도로부터 은둔하는 삶은 가능하며 자급자족적인 노동형태로 생계를 꾸려 나갈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주'는 매일 매일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열린 선택이 아니다.

국가와 시장이 일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형성하고 행동양식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과 국가는 중립적인 제도로 나타나며 삶 그 자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은 때때로 평범한 시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시장을 그들의 삶에 적대적인 것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때문에 촉발된 촛불시위는 국가가 시민의 요구에 대해 둔감하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이윤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국가는 공공의 이해를 가장한 '관료적' 체제이고 시장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가장한 '독점적' 제도라는 점이 드러난다. 국가가 '관료적'인 이유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관료집단 그 자체의 이익과 거대 자본의 로비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독점적'인 이유는 시민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기 보다는 이윤을 쫓아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의 생산과 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과 자유주의적 국가라는 일상은 그것의 '피해자'인 시민을 시장에서의 개별화된 소비자, 그리고 형식적 정치 공동체의 고립된 유권자로 구성함으로써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체제로부터 억압받고 착취받지만 바로 그 체제에 대해 동의하고 순응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평범한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관료적' 국가를 민주화하고, '독점적' 시장을 사회적 통제아래 둘 수 있는 가능성, 즉 국가를 시민의 목소리에 반응적이게 하고, 시장을 시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겉으로 드러난 현실만을 보았을 때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류의 장구한 역사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실현되는 드라마에 다름 아니었다. 역사를 가득 매우고 있는 수많은 농민과 노동자들의 반란과 봉기는 불가능해 보였던 요구, 즉 신분제철폐, 선거권, 민주주의 등을 요구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들은 이미 상식이 되지 않았는가?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은 셀 수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과 요구들로 채워져 있다. 다만 그들의 목소리를 개별화하고 고립시키는 국가와 시장의 힘을 대결하기에 버거워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의 민주화

우선 '국가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회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로부터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국가는 모든 것이 일사분란하게 돌아가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풀뿌리 시민운동으로부터 성장한 급진적 세력이 지방적 차원에서 국가제도에 개입했던 많은 사례들은 사회운동이 국가기구의 빈틈을 헤집고 들어가 그것을 민주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을 보여주었다(뒤에서 언급될 런던의 사례를 보라).

둘째,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각국 정부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본주의적 시장의 전면화는

제6차 생태사회포럼

지구상의 대다수의 인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지 못했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무력화시킨 후 시장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을 회복한(신자유주의로 무장한) 신우파는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의 제도적, 인격적, 자연적 조건들을 상품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경제사학자 폴라니(Karl Polanyi)의 말을 빌리면 시장은 사회(적 통제)로부터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분리”(disembedded)한 것이다. 그가 예측한 바대로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 국가적, 국제적 제도들은 초국적 기업(삼성, LG, 현대 등의 재벌 기업은 이미 한국 기업이 아니라 초국적인 자본의 성격을 갖는다)의 이윤추구 운동을 규제하는 그들의 권력을 점차 상실했고, 지역 공동체와 사회네트워크는 시장의 힘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다수의 사람들은 일자리 감소, 실업/불안정한 일자리, 공적인 안전망의 감소의 결과로 정신적·육체적 손상을 입었다. 실업과 고용 불안정은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이것은 질병발생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 또한 자본축적의 논리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이 경제성장의 자연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지속함으로써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같은 환경의 붕괴가 초래되었다.

이런 재앙에 직면하여 사회는 시장을 다시 사회적 통제 아래 두려는 운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시장 경제의 전면화가 가져온 이런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시장을 다시 사회로 들여오기 위해 사회운동—WTO, IMF, 세계은행, 초국적 자본들에 의해 주도되는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저항하는 세계적 네트워크에서부터 다양한 공동체 행동—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모든 운동들은 생활의 모든 측면을 사유화하고 모든 활동과 가치를 상품으로 변형하려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원초적인 저항에 기초한다.

셋째로, 자본의 총체적인 상품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형태의 비시장적 관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자본(시장)은 이런 비시장적 관계들을 식민화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식민화에 성공하지만, 결코 모든 비시장적 관계들을 완전하게 자본주의화 할 수는 없다. 가족과 지역공동체는 자본의 현금계산의 논리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상호 호혜적인 원리들이 살아 있다. 또한 더욱 의식적인 비시장적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생활협동조합운동과 공동체 운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비시장적 관계를 만들려는 시도들이다.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의 시작이 자본의 힘에 맞서 조합원들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노동조합조차도 비시장적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많은 경우 공동체들을 통해 드러나는 저항은 조직화되거나 정식화되지 않은 채 존재하지만, 이 영역들에서의 행동은 미래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비시장적 관계들과 풀뿌리 사회운동의 역량에 기초하지 않고 오로지 국가권력을 통해 시장의 힘을 통제하려고 했던 사회민주주의적 전략은 실패했다. 이런 의미에서 진보적 정당의 역할은 비시장적 관계들과 풀뿌리 사회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힘을 사회화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이는 ‘국가 안에서 국가에 반대하는’ 투쟁을 동반한다. 대중적 참여를 촉진하지 않고서 시장의 힘을 사회화하려는 시도는 일종의 온정주의에 빠질 수 있다. 진보정당은 제도적 장치로서의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국가 장치 자체를 풀뿌리 사회운동의 힘에 의해 끊임없이 변형될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지만 동시에 사회운동에 의해 스스로를 변형하고 축소시킬 수 있는 전략이 요청된다.

시장의 사회화

시장의 사회화 전략은 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경제 체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것은 계획(planning)과 참여(participation)의 결합이라는 대안사회의 조직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참여가 없는 계획은 전체주의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계획이 결여된 참여는 비조직화된 다양한 이해표출을 넘어설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하이에크가 제기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과 시장기제의 문제이다. 하이에

제6차 생태사회포럼

크에게 시장은 신고전파 경제학이 가정하는 것과 같이 수요와 공급이 평형에 도달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은 평범한 대중이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에 대해 가지는 정식화될 수 없는 암묵적 지식을 표현하는 유일한 기제라는 것이 하이예크의 주장이다. 하이예크에 따르면 계획당국이 수많은 개인의 암묵적 지식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암묵적 지식은 시장메커니즘 내에서 개인들(기업가들)에 의해 밝혀진다. 이것이 시장의 인식 기능이다. 하이예크는 시장의 인식기능이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계획경제를 전체주의로 비판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하이예크의 암묵적 지식의 표현기제로서의 시장옹호는 자원과 정보의 불평등한 배분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이 시장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표출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비판될 수 있다. 하이예크는 생산과 분배의 원리를 자본주의적 이윤추구로부터 '노동력' 그 자체의 중요성으로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시장의 힘은 민주적 의사표출 과정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생태주의적 시장 사회화전략은 '노동력의 생산과 재생산 과정'은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에 복속되어서는 안 되는 그 자체로 중요성을 가지는 목표임을 강조한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의료, 교육, 상수도, 위생시설'과 같은 기본적 공공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기본표준에 맞추어 충분한 식품, 의류, 주택, 가재도구를 구매할 수 있는 최소 화폐소득'도 보장되어야 한다. 덧붙여 '도시교통'과 '정보네트워크 접근'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 필요한 자원과 정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참여', 즉 민주주의의 확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태주의적 관점에 하이예크의 문제제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기한 자원과 정보의 민주적 재분배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기초적인 공공서비스와 최소한의 화폐소득을 넘어서는 지식과 정보의 민주적 재분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중의 일상적 느낌, 실천적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적인 교육과 지원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식의 수준을 실천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실천적 '지식'은 일상적 경험에서 개개인이 획득하게 되는 정식화되기 어려운 지식이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에 관한 생각들이다. 과학적 지식은 지식인 집단, 정당, 국가에 의해 제시되는 통합적 지식이다. 하이예크 주장의 핵심은 전자, 즉 일상에서 얻어지는 실천적 지식은 암묵적이며 그래서 시장의 가격 기제를 통하지 않고서는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란 후자의 지식, 즉 과학적 지식의 이름으로 다양한 인민의 정식화되지 않은 필요를 억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실천적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적인 지원과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은 하이예크가 기대고 있는 시장의 가격기제가 (하이예크의 주장과는 반대로) 암묵적 지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전제로 한다. 암묵적 지식은 대중의 고양된 의식과 능력에 기초한 '확장된'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태주의적 시장사회화 전략은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축적되는 실천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개 노동조합과 지역 공동체 집단을 통해 구성되는 일상의 암묵적 지식은 현존 자본주의 사회질서 내에서는 제대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잠재적 토대를 형성한다. 이것은 하이예크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이예크가 시장의 가격기제 이외에 일상생활의 암묵적 지식을 표현할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해 생태주의적 시장사회화 전략은 그러한 암묵적 지식을 보다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구조적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실천적 지식이 발전하기 위해서, 즉 실천적 지식이 대중 참여로 발전하고 그것을 통해 시장기제를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원과 정보의 급진적 재분배가 관건이다. '적절한 자원 없이 효과적 참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암묵적 지식이 제도적 지원(자원과 정보의 민주적 분배)과 결합된다면 대중은 시장을 사회화하고 국가를 민주화할 수 있는 공적 정보네트워크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6차 생태사회포럼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미 다양한 비시장적 관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시장적 관계는 실천적 지식이 구성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간을, 그리고 실천적 지식을 민주적 의사표현 통로의 제도화를 통해 더욱 발전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암묵적 지식을 총체적전략과 결합하는 것은 민주적 참여와 그것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성에 달려 있다.

급진적 사회운동의 성격

세계적으로 1960년대 이래 출현한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은 공통적인 성격일 보여준다. 첫째, 그 모든 운동들은 일상생활의 경험과 여기서 유래하는 실천적 지식을 정치화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들의 방법은 풀뿌리 참여를 토대로 이를 통해 국가를 민주화하려는 시도였다. 둘째, 국가에 침투하여 그것을 반응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로 변형하려고 시도한 풀뿌리 운동은 또한 국가를 압박하여 시장을 사회적인 통제 아래 두려 시도했다. 셋째, 이 모든 운동들은 일상생활과 시장을 정치화하는 과정에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풀뿌리에 기초한 사회운동에서조차 관료적인 위계질서가 출현할 수 있으며 제도정치 안으로의 진입은 사회운동이 가졌던 확장된 민주적 원리를 침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운동은 개인의 자율성에 활력을 부여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의 관료화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율성과 역량이라는 생각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는 달라야 했다. 한편으로 자율성과 역량은 공동체 생활에서 훈련, 교육,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개인(자율성)과 공공(참여)생활을 연결하는 일종의 결절점이 될 수 있다. '공동의' 이익이라는 이름하에 '개인적 이익'을 극단적으로 그리고 도덕주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만큼이나 위험하다. 우리는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현실사회주의를 통해 이러한 경향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알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와 민주주의(평등)의 원리에 따라 일상생활 공식적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권리와 민주주의(자유)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율성에 활력을 부여하는 이중의 운동이 필요하다.

제도정치와 사회운동정치

좀 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질문은 '제도 정치와 제도 바깥의 정치', 또는 정당과 사회운동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있다. 제도와외적 정치만을 추구함으로써 혁명을 추구했던 좌파의 전략은 이미 불가능해진지 오래다. 이런 조건에서 남아 있는 가능한 길은 기존의 낡은 정치로 동화되는 않으면서도 제도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길이다. 낡은 질서 안에서 낡은 질서를 바꾸어내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도 바깥의 정치, 즉 시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도 바깥의 정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공통점이 없지는 않다. 제도바깥의 사회운동의 정치는 일상생활의 쟁점들과 관련된 자발적 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물론 이러한 사회운동 정치는 비록 낡은 질서를 변혁하는데 필요한 잠재력을 지니지만, 종종 특정한 쟁점과 관련하여 낡은 제도 안의 정치 행위자들을 압박하는 압력집단의 성격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운동 정치가 가진 잠재력을 제도정치의 변형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여기서 장기적인 전략은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 상대적으로 고립된 사회운동이 발생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연구'를 통해 '대중의 경험에 견고하게 뿌리내린' 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략적 개입'은 제도 바깥의 운동정치가 급진적 성격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그 활동 분야를 제도 영역으로 확장

제6차 생태사회포럼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개입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의 경험, 즉 실천적 지식의 축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구조에 대한 과학적 이해 또는 장기적 전략은 '위로부터'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도 구성될 수 있다. '아래로부터' 유형의 핵심 지점이 다양한 운동들의 연대라면, '위로부터' 유형의 핵심 지점은 정당과 사회운동의 연결이다.

정당과 사회운동

다양한 사회운동, 즉 노동자운동, 여성운동, 생태운동, 평화운동 등의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다양한 사회운동은 자본주의와 관료적 정치제도의 모순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출현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운동 각각이 대개 구체적인 쟁점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큰 그림, 말하자면 상호이해와 미래의 전략에 관한 지속적인 토론의 실마리가 되는 큰 그림을 놓칠 위험이 있다. 각각의 사회운동이 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산출한 사회조건을 변형할 수 없다. 이는 사회운동이 발생하는 다양한 하위구조들이 복잡한 구조적 전체의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들은 단일 쟁점에 관여하므로 스스로 연대를 확립하는 데 곤란을 겪는다.

연대의 곤란은 현실적으로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수많은 연대의 조직적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형태가 정당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일단 기존사회를 바꾸려는 대항적 헤게모니전략이 제도 정치와 제도 바깥 정치의 연결을 추구한다면 제도정치에서 정당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제도정치 안에서 진지를 구축하기 이전이라도 정당은 제도정치 안의 정보, 지식, 자원을 사회운동에 제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 영국의 런던에서 런던 시정부가 급진적인 풀뿌리 정치를 확장할 수 있었던 조건은 런던 노동당을 통해 신좌파 분파가 국가제도 안의 정보와 자원을 급진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풀뿌리 사회운동의 제도정치로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자원과 정보의 획득은 필수적이다. 런던의 급진적 시정부는 이러한 정보와 자원의 급진적 분배를 통해 서로 고립된 풀뿌리 운동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갈등을 줄이고 부문적 이익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지식과 정보의 분배, 그리고 이것을 둘러싼 새로운 토론과 대화는 풀뿌리 운동에 참여하는 개별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을 높이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사회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과정을 '의식고양과정'(consciousness-raising process)라고 부른다.

사회운동이 총체적 정치 전략과 적합한 자원 및 정보의 부재로 고통을 겪는다면, 진보적 정당은 대중적 토대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관료화 경향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관료화 경향을 막기 위해서 진보적 정당은 사회운동과의 창조적 '긴장'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한다. 정당은 선거와 의회정치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아야 하며 사회운동 간의 연대의 거점, 즉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스스로를 조직해야 한다. 이 같은 유형의 정당은 전통적인 사회민주당, 노동당, 또는 공산당 모델과는 확연하게 달라야 한다. 몇몇 사회이론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정당을 '사회운동형 정당'으로 개념화한다.

사회운동형 정당 모델에 따르면 정당과 사회운동 사이에는 제도 정치 및 제도 바깥의 정치와 관련된 어떤 분업도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유형의 정당은 단순한 의회정당이 아니라 사회운동에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풀뿌리 사회운동은 스스로를 제도 바깥의 공간에 제한할 필요가 없다. 사회운동의 조직된 형태로서 급진 정당을 통해 제도 정치와 제도외적 정치의 연결이 발전되고 강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런던의 급진적 시의회 경험은 진보적 정당과 풀뿌리 사회운동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장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긴장임을 보여주었다. 이런 종류의 긴장은 폐쇄적이지 않은 대항 헤게모니 기획에 필수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지식의 정치학

영국의 역사가 E. P. 톰슨이 그의 역사학적 저작들에서 보여준 것처럼 억압과 착취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맹아적 저항과 그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실천적 지식은 존재한다. 그 반대편에 맹아적 저항과 실천적 지식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과학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강조했던 이론주의와 과학주의도 항상 존재했다. 톰슨은 비판담론이 추상적인 역사발전의 법칙, 대중의 구체적 삶과 동떨어진 정세분석과 정치 전략이 아닌 실천적 지식이 구성되는 삶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지적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과학적 지식은 이러한 구체적 삶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배적인 담론에서 과학은 추상적인 법칙을 도출하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이지만 저항적 담론에서의 과학은 구체적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집단적 주체들이 자신들의 인식지평을 넓혀가고 상호이해하며 공통의 투쟁대상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정보, 그리고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의 지식은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협동과 돌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지식은 개인을, 때로는 시민으로, 때로는 소비자로, 때로는 투자자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역능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실천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의 결합은 우리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구조적 조건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인간의 의식과 정체성은 문화와 생활방식, 즉 사회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 이런 이유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불만과 저항 또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자본주의적 논리가 아무리 지배적 논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회적 관계를 완벽하게 자본주의화 또는 상품화할 수는 없다. 지금은 이것마저도 붕괴하고 있지만 가족공동체와 지역공동체를 자본의 논리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이러한 공동체들에서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원리는 상호이해와 존중 그리고 협동이기에 때문이다. 경쟁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 곳곳에 수세에 몰려 있는 기존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적 공동체들도 존재한다. 생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 같은 대안적 운동들이 바로 그것들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제기되고 그것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 반생태적인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안적 생활, 실천의 공간을 지키고, 만들고 확장시켜야 한다. 그 속에서 대안적 인간관계, 타자를 배려하는 공동체적 윤리와 더불어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수히 많은 모순과 갈등에 직면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고립된 개인으로서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급 또는 사회세력(여성, 성적 소수자, 인종적 소수자, 장애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한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회계급 또는 사회세력은 현존하는 질서에 대해 도전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들의 현실 인식이 파편적이라는 것에 있다. 일상에서 얻어진 실천적 지식은 문제를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총체적 분석까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구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직면한 당장의 문제가 더 큰 사회적 모순이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 분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적 분석이 완벽하게 사회구조를 설명하고 미래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억압, 착취, 빈곤, 차별, 불평등 같은 사회적 모순이 현존하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에서 드러나고 있는 양상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비판적 시각들이 접근방법이나 초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사회구조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것이 과학적 분석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이다. 이것을 넘어서는 '과학적' 지식은 교조, 독단, 권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과학적 지식이 합리적이란 것은 과학이 증거, 일관성, 적합성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 토론함으로써 발전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정치의 영역

이제 정치는 이미 구획된 좁은 의미의 정치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넓은 제도적 질서가 규정한 '비공식적' 또는 '비정치적' 영역을 정치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경제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을 정치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정치적 영역의 정치화는 좁은 의미의 정치 즉 제도정치의 확장과 변화를 의미한다. 비공식적 영역의 정치화란 정치와 사회, 그리고 경제의 모든 영역을 민주적 참여와 토론에 개방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정치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의 원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민주화"다. 국가 민주화의 제 1의 목표는 자원, 지식, 정보의 급진적 재분배에 의한 대중을 역능화하는(empowering)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시장만큼 효과적으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은 이윤의 논리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다. 가사노동, 육아, 돌봄노동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 자연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이상변화(기후변화를 보라)는 가격과 이윤을 통해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적 헤게모니 전략은 사회(사회운동)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가능한 정보와 자원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사회운동)이어야 하지만 그 자원과 정보를 민주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민주화된 국가일 수밖에 없다. 즉 국가의 민주화는 시민의 능력을 높이는 것을 통해 국가 스스로뿐만 아니라 시장 또한 사회의 민주적 통제에 종속시키는 전략의 일부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회화의 두 과제는 사회(사회운동) 또는 시민의 능력(capabilities 또는 capacities)의 신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진보적 정당 또는 정치세력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국가기구와 지방자치단체를 사회로부터의 캠페인을 통해 압박할 수 있다. 진보정치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시적(pre-figurative) 실천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가 시민사회에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자체가 사회의 통제를 받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제고된 사회의 역능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대안적 사회변혁전략의 제도화는 '국가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회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곧 제도화가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한 층 진일보한 운동의 정치를 보장하기 위한 단계를 의미한다. 대중의 능력을 제고하는 급진적 민주주의 전략이 국가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회화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운동의 정치(대중의 확장된 민주적 참여와 이를 통한 국가와 시장의 민주적 통제)는 다시 더 많은 사회의 직접적 참여를 보장하는 국가의 민주화와 시장의 사회화 즉 운동의 제도화를 강제할 수 있다. 이것을 '제도화와 운동의 변증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도정치와 비제도정치의 결합,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의 결합은 일상생활의 실천적 지식이 어떻게 과학적 분석과 결합할 수 있는가라는 앞에서 제기한 문제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한다.

하나의 사례: 사회주의적 광역 런던 시의회(Greater London Council, GLC) 경험

1981-6년까지 런던 시정을 담당했던 노동당 좌파 주도의 사회주의적 지방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의 민주화, 시장의 사회화, 민중의 역능화를 시도했던 대표적 실험이었다. GLC는 대중교통, 주택, 의료 등의 공적 영역에서 보통사람들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socially useful production)을 정책수립과 집행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정책수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필요를 시민들 스스로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래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

제6차 생태사회포럼

하는 것이다. 신우파가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대양'의 작은 섬에 불과했던 런던의 경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제를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사회운동 단체의 캠페인과 지역개발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계획, 즉 민중계획을 지원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였다. 동시에 GLC는 보통사람들의 실천적 지식에 근거하지만 그 내부의 갈등적 측면을 극복하는 전반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통합적인 전략적 계획이 없이는 국지적 요구와 저항은 좌초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급진적 GLC의 전략은 중장기적 전략수립을 참여민주주의와 결합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지식의 정치"였다. 명목뿐인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즉 직접적인 민주적 참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자원이 제공되어야 했다. 독점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의 재분배 없는 민주주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GLC는 각종 정보 네트워크(예를 들어 기술 네트워크), 지역 정보센터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⁶⁾. 그리고 지역주민 스스로 도크랜드즈(Docklands)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주었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실천적 지식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과 지원이 제공된 것이다.

급진적 GLC가 내세운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이라는 원칙은 시장기제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었다. 시장은 "충족되지 못한 필요에 조응"할 수 없고 "점증하는 현실적 필요"를 "경제적인 유효수요"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부조응은 시장메커니즘 그 자체가 기본적 필요충족에 부적합하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자원 또는 자기조직화의 결핍으로 인해, 사회의 다수가 시장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표현할 수 있는 조건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이라는 생각은 1970년대 "루카스 항공 노동자 계획"을 통해서 유명해졌다. "루카스 계획"은 군수생산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통해서, 잉여인원을 처리하려는 경영계획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다. 루카스 항공은 비행기 시스템, 설비 디자인 및 생산 면에서 유럽 최대의 기업이었고, 그 생산품의 50%가 군수 항공기 및 다른 방위업무와 관련되었다. 합리화라는 명목의 대규모 잉여인원 해고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노동자들은 의료장비, 대안적 에너지 자원, 운송시스템, 제동시스템, 해양공학과 항공공학(원격조정) 설비를 포함하는 대안적 계획을 발표했다. 첨단기술을 통해 독거노인들을 위한 난방조절장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쉬운 버스설계 등의 대안적 생산계획을 제시했다. 그들의 주장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이라는 개념으로 요약되었다. GLC는 루카스계획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공공정책 수립의 기준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했다.

급진적 GLC가 공공정책을 수립하는데서 역점을 두었던 것은 제도화된 차별의 벽을 허무는 것이었다. 노동에 대한 협소한 노동자주의적 시각(남성중심주의적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육아와 가사노동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제시하고, 여성의 고용에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정책, 탁아 시설의 확대, 가사 서비스를 여성의 창업과 연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서비스 제공 등의 혁신적 사회정책을 도입하려 했다. 가사노동의 불평등한 분업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남성성과 여성성의 고정된 이미지 비판했으며, 장기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가사/육아의 분담의 전망을 제시했다. 또한 제도화된 인종주의, 이성애주의에 대한 투쟁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제도화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적 경제에 대한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GLC는 거대한 국가기구로서의 구매력을 통해 사적 경제영역에 개입하려 했다(7억 파운드 규모로 2만개의 기업과 계약). '원칙적으로' GLC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해당 기업은 인종적, 성적 차별금지, 건강과 안전, 장애인 고용 의무 등을 준수해야만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GLC는 일종의 투자은행으로 GLEB를 설립하고 사적 대기업에 대한 개입을 시도했다.

6) GLC는 6개의 기술네트워크(Technology Networks, TN)를 만들었다. TN은 지역에 있는 작업장과 공동체를 기술전문대학(polytechnics)과 연결시켰다.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인간의 능력을 제한하기보다는 확대하는 기계의 전형"을 발전시키도록 도와 주었다.

제6차 생태사회포럼

화폐적 기준에 따르면, 개발자와 투기자는 도시지역의 재개발을 원하며, 특히 “대중의 필요나 선호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사무지역, 고급주택, 호텔, 사적 레저시설 등으로 전환하기를 원한다. 다른 한편 어느 곳에서나 지역주민들은 경제적·사회적 협력의 토대가 되는 끈끈한 공동체적 네트워크 안에서 생활한다. 이러한 공동체적 유대는 상업적 재개발 계획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신의 필요와 상업적 재개발 계획의 모순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동시에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효과적일 것이며”, “그들의 필요와 충돌하는 특정한 개발계획”에 저항해야 한다고 깨달았다. 이런 투쟁 사례들은 많이 존재했지만, 가장 유명한 사례는 도크랜드즈였다. 도크랜드즈의 재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계획과 도시정책에 관해 서로 상반되는 철학과 정책간의 경합에 다름 아니었다. 지역 주민들에 입장에서 그것은 “지배에 대한 투쟁”이었다.

무역 패턴의 변화는 런던 이스트엔드의 경제적 중심이었던 선착장과 부두의 쇠퇴를 낳았다. 그런 쇠퇴는 활용되지 않는 대규모의 토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개발자는 고소득자를 위한 주택과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이윤을 얻기를 원했다. 대처 정부는 그들의 편이었다. 대처 정부는 개발계획 권한을 지방정부에서 빼앗았고, 1980년에 “런던도크랜드개발공사”(London Docklands Development Corporation, LDDC)를 설치했다. LDDC는 건설기업가 존 몰렘스(John Mowlems)가 제안한 “단거리이륙공항”계획을 밀어붙였다. LDDC는 그 계획이 약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첨단기술기업을 유치하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계획과 지방 주민의 필요 사이에 거대한 격차가 존재했다.

초기 단계 동안에 상업적 개발에 반대하는 다양한 투쟁이 존재했지만, 대부분은 “계획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제한된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 방어적 투쟁을 넘어서지 못했다. 정치적 지도력과 총괄전략이 없다면, 공동체의 투쟁은 이런 어려움을 돌파하기 매우 힘들다. 다른 한편, 그 당시에 GLC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략계획의 권한을 잃었다. 그 결과 GLC는 매우 제한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GLC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캠페인과 지방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재량권의 활용이었다.” 이것은 매우 제한된 권한이었지만 지역 주민의 자발적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대중참여 계획 단위”(Popular Planning Unit)는 지역 주민 캠페인을 자신의 대안 계획과 결합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GLC는 지방 주민의 실천적, 암묵적 지식을 대안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괄전략에 대한 방향과 자원과 정보를 제공했다.

“민중계획”은 LDDC와 대처 정부에 의해 좌절되었다. 달리 말하면, GLC가 그에 대항하면서도 그 내부로부터 대항하게모니를 구축하려고 투쟁했던(시장과 국가의 내부에서 그에 대항한다) 바로 그 시장과 국가에 의해 패배했다. 하지만, 시장과 국가는 예상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GLC와 지역 주민들은 국가와 시장 내부로부터 그것에 저항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의미에서 “민중계획”으로부터 배울 교훈은 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맹자 내부에 관한 것이다. 우선 GLC와 지역의 행동단체들은 심사 절차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 그들은 “민중계획”이 LDDC의 계획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개발에 영향을 받는 모든 공동체 내부로부터 압도적인 압력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민중계획”은 대중의 의견들이 일단 점화되면 삼시간에 퍼져나갈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했다. 현실에서 그것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제였다.

둘째, 첫 번째 문제와 관련되어, 지역주민들은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지 못했다. 일부는 공항의 목적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며, 더욱 큰 발전을 위한 신규투자 유도라고 믿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51%가 공항건설을 찬성했는데, 그것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상충은 상명하달식 교육이 아니라 그 자신들 간의 공개적 의사소통을 통해 변화되어야 했다. 물론 이러한 공개적 의사소통과 토론은 GLC의 전략계획이 제시하는 큰 방향에 따라야만 했다.

요컨대, 이해관계의 충돌은 지역 주민들의 실천적 지식과 GLC의 전략계획에 근거한 총괄전략으로의

제6차 생태사회포럼

결합을 통해 해결되어야만 했다. 그 결합은 GLC와 지역주민들 사이의, 그리고 지역주민 자신들 사이의 공개적 토론을 통해 공고화되어야 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런 장기적 과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주어지지 않았다. 철의 여인은 그럴 시간을 줄 만큼 인내심이 많지 않았다.

셋째,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집중화된 ‘전략적’ 개입”과 “경제정책의 민주화” 사이에는 “해소될 수 없는 긴장”이 존재했다. 의도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GLC는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했고, 사실상 “민중계획”은 전문가에 의해 정식화되었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총괄전략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실천적 지식과 과학적 분석의 개방적 토론과 의사소통에 비해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GLC 전(前) 사무직 노동자의 언급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민중의 계획>이라는 수사는 오류다. 이런 주장이 대중참여 계획이 나쁜 생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훌륭한 자문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 계획이 실제로 풀뿌리로부터 도출되었다고 과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며, 실제로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GLC가 주도한 모든 행동들은 “긴장이 지배하는 동맹”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었다. 때때로 급진적인 공공정부와 그 지원을 받는 전문가와 기술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긴장을 교묘히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능한 대응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동맹자들 사이의 창조적 긴장(productive tensions)을 강조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부록>

도시와 농촌의 분리에 대한 녹색사회주의의 진단-영국 적-녹 연구그룹의 제안

서영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1. 머리말

마르크스는 근대 부르주아혁명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부르주아지는 생산도구들, 따라서, 생산 관계들에,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들 전체에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존립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이전의 다른 모든 산업계급들에게는 낡은 생산 양식의 변함없는 유지가 그 제1의 존립 조건이었다. 생산의 끊임없는 변혁, 모든 사회 상태들의 부단한 동요, 항구적 불안과 격동이 부르주아 시대를 이전의 모든 시대와 구별시켜 준다. 굳고 녹슨 모든 관계들은 오랫동안 신성시되어 온 관념들 및 견해들과 함께 해체되고, 새롭게 형성된 모든 것들은 정착되기 전에 낡은 것이 되어 버린다. 모든 신분적인 것, 모든 정체적인 것은 증발되어 버리고, 모든 신성한 것은 모독당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의 생활상의 지위와 연관들을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맑스/엔겔스, 1991: 403).

마르크스는 근대사회가 초래할 또 다른 착취와 억압을 주장하지만 위에서 묘사한 근대사회의 역동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낡은 사회적 관계를 철폐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새로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진보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진보가 구현되는 공간은 도시이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르주아지는 농촌을 도시의 지배 아래 복속시켰다. 부르주아지는 거대한 도시들을 만들고, 도시 인구의 수를 농촌 인구의 비해 크게 증가시켰으며, 그리하여 인구의 현저한 부분을 농촌 생활의 우매함으로부터 떼어 내었다.” (맑스/엔겔스, 1991: 404)

19세기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시를 농촌과 대비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경제구조 뿐만 아니라 소비와 생활방식, 그리고 포괄적인 문화를 아우르는 근대화(modernisation)의 과정은 곧 농촌의 그것들과는 정 반대되는 것이었다. 곧 근대화는 도시화(urbanisation)와 동일시되었고 그것은 반 농촌화에 다름 아니었다. 그것을 합리화라고 개념화하든(막스 베버), 사회적 분업의 진전에 따른 산업화라고 부르든(에밀 뒤르켐), 아니면 자본주의의 전면화라고 부르든(칼 마르크스), 사회학의 기초를 놓은 이론가들의 관심은 근대화/도시화 과정에 맞추어져 있었다. 궁극적으로 근대화/도시화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치체계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도시와 농촌을 가르고,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을 가르는 이분법적 대립이 고전사회학을 지배했다고 할 수 있다(Saunders, 1980; Dickens, 2000: 154).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비판은 두 방향에서 제기되었다. 하나는 다양한 사회운동을 옹호하는 포스트모던한 사회이론으로부터 나온다. 사람들은 이분법적 패러다임에 의해 이미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과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공간, 스스로의 정체성을 끊임 없이 창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가 실현되는 주 무대는 도시적 공간이다(Dickens, 2000:153). 포스트모던 사회

제6차 생태사회포럼

이론이 소비사회의 진전에 따른 사회의 유동성에 근거한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농촌의 특징을 '다양성' 속에 담아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농촌을 도시와 대비시키고 전통적 또는 종교적 삶을 찬양하는 생태중심주의적 입장에서부터 제기된 비판이다. 이러한 입장은 도시적 삶은 낭비적이고 반생태적인 것으로 비판한다(Dickens, 2000: 153). 생태주의자들이 가지는 반도시적 태도와 자연그대로의 삶에 대한 동경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다(Bopwood and Mellor, 2007: 76). 생태주의의 반도시적 태도는 농촌의 가치를 적극 옹호하는 환경운동과 도시에 기초한 좌파 사이의 오래된 긴장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Benton, 2007: 21).

이 글에서 소개할 영국의 적-록 연구그룹의 기본적 입장은 포스트모던한 정체성의 정치와 심층생태주의와 거리를 두면서도 전통적인 도시-농촌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것이다. 도시가 가지는 새로운 문명, 진보적인 문화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도시와 농촌의 분리, 그리고 농촌과 농업의 쇠락에 따른 인간 생존의 문제를 제기한다. 자연과 인간, 도시와 농촌 사이의 존재하는 신진대사가 파열됨(metabolic rift)에 따라 초래된 토양비옥도의 상실과 노폐물 처리의 문제는 도시-농촌의 분리가 가져온 균형상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Benton, 2007: 21). 이제 우리는 개별적인 접근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사회적, 생태적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 공장형 가축 사육이 불러온 광우병과 구제역, 역시 기업형 농업과 식품생산-유통이 초래한 식품안전성의 위협, 소비중심의 도시 생활이 불러온 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 등의 전지구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대화 과정 속에서 파열되었던 농촌과 도시 사이의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하도록 강제한다. 이제 도시-농촌사이의 관계는 농촌의 위기, 그리고 도시의 위기라는 서로 분리된 위기들을 생태적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의 관점에서 재접합함으로써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녹색사회주의(적-록)는 농촌 또는 도시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 위의 인간 삶의 양식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Hopwood and Mellor, 2007: 79).

아래에서는 이러한 녹색사회주의로의 입장에서부터 도시의 위기, 농촌사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적 도시에 대한 상상, 그리고 농촌과 도시의 분열을 극복에 대한 현실적 유토피아(Real Utopia)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이들의 논의는 영국이라는 특수한 사례에 맞추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⁷⁾

2. 도시화의 역리현상과 생태적 도시

1) 20세기 도시의 변천

도시화 과정과 그것이 초래하는 새로운 계급분할은 농촌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영국에서는 1차 대전 후 잠깐 동안의 시기를 제외하면 농업은 쇠퇴했고 농촌의 토지 가치는 폭락했다. 규모가 큰 시골의 부동산은 쪼개어져서 건설업자와 투기적 개발업자들에게 팔렸다. 이러한 건설업자와 개발업자들의 이해관계는 도시의 중간계급의 그것과 일치했다. 같은 시기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었고, 안정적인 수입과 경제적 조건을 누리는 노동자였던 도시의 중간계급은 도시의 경계로부터 퍼져 나가고 있었던 근교 지역의 주택소유와 목가적 생활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도시중간계급이 누리게 된 상대적인 풍요, 이에 동반된 승용차의 증가(1930년대 이미 백만 대), 일 년에 한 번 씩 주어지는 휴가와 레저여행, 해안휴양지의 발전 등은 변화된 도시 중간계급 삶의 양태

7) 이 글은 필자의 주장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생태사회주의적 학술지인 *Capitalism, Nature, Socialism* 18(3)과 18(4) 두 호에 걸쳐 게재된 심포지엄에 실린 적-록 연구그룹(Red-Green Study Group)의 성원들의 글을 요약·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적 유토피아(Real Utopia)는 에릭 올린 라이트(Erik Olin Wright)를 중심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학술회의와 그것에 기초한 출판프로젝트의 이름이다. 학술지 *Politics and Society*를 통해 출판되었고, 버소(Verso) 출판사에 의해 단행본으로 간행되고 있다.

제6차 생태사회포럼

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다(Benton, 2007: 24).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일치는 곧 근교화(suburbanization)로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로 도심은 공동화되어 버려지고 빈곤층의 거주지로 변모한다. 이러한 근교화와 도심 공동화 현상에 동반되었던 것은 도시근교에서 도심으로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의 확충과 이에 따른 녹지의 훼손이었다. 근교지역은 주거를 위한 기숙사 역할을 하는 마을(dormitory village)이었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일터 사이에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었다(Bopwood and Mellor, 2007: 78). 핵심은 이러한 반도시화(counterurbanization)의 특혜가 부유한 도시 중간계급만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근교화의 이면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에 다름 아니었다(Dickens, 2000: 150).

20기 중반의 근교화 과정에 의해 형성된 도시와 농촌의 경계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적 변화는 20세기 후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근교화가 역전되지 않고 더욱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도시 자체의 기능과 문화가 급격하게 변모하게 된다. 이제 도시의 문화와 도시계획, 그리고 다양한 도시정책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의 도시들이 나름의 전통과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로 상징되는 지구화는 도시들의 풍광을 획일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도시는 그 자체의 전통과 문화에 의해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된 것이다. 즉 상실된 도시적 전통과 정체성은 자본을 유지하려는 무한 경쟁에 의해 대체된다(Bopwood and Mellor, 2007: 78). 도시의 전통과 정체성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광객을 끌어 들이거나 내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것에 모든 것에 맞추어져 개발되고 관리된다(Bopwood and Mellor, 2007: 85). 이러한 도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은 도시의 공공영역을 붕괴시키고 사회적 분할(social division)과 소외(alienation)를 심화시킨다. 20세기 후반 도시의 풍광을 변화시킨 논리가 20세기 초의 그것과는 달라졌지만 두 가지 기본적인 사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한편으로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불균등 발전은 더욱 심화되었고, 다른 한편 도시 안의 사회적 불평등 또한 더욱 악화되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사회적 분할과 소외가 단순히 경제적 수준에서만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공영역과 사회적 유대의 소멸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삶의 만족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소비를 추구한다. 이것은 일종의 보상적 위안을 찾는 것이다. 결국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이러한 소비수단조차 박탈당함으로써 정체성의 상실과 좌절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비주의적 생활방식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태롭게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보상적 소비의 기저를 형성하는 필요(needs)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끝없는 소비에의 욕망이 창출될 뿐이다(Bopwood and Mellor, 2007: 85).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속의 삶의 양식이다.

2) 생태적 도시-문명 없는 도시화를 넘어

많은 사회이론가들이 분석했듯이 맹목적인 근대화는 도시의 삶을 삭막하게 만들었다. 도시는 공동체적 삶을 붕괴시키고 고립된 개인들 간의 경쟁을 제일의 원리로 삼았다. 근대 초기의 도시화는 위생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주거지로 표상되는 극단적 빈곤으로 점철되었다. 소위 복지국가가 이러한 양극화를 보완했지만 20세기 후반의 도시 풍경은 삶의 모든 요소들이 철저히 자본의 논리에 종속됨에 따라 복지국가의 조치들을 모두 역전시켰다.

그러나 도시가 항상 부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는 독일의 옛 속담처럼 도시는 창의적 상상과 진보의 공간이기도 했다. 붐우드와 멜러가 환기시키고 있듯이 이러한 창의적 문명은 여전히 도시의 삶 속에 살아 있다. 이러한 창의적 문명은 '다양성으로서의 차이는 강화하고 불평등으로서의 차이는 줄이는 것'이다(Bopwood and Mellor, 2007: 80). 또한 도시는 다양성(diversity)과 밀도(density), 즉 밀접한 사회적 관계와 다양한 정체성이 결합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여기서 정체성과 다양성은 도시의 창조적 동학이지만 그것이 곧 이기적인 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Bopwood and Mellor, 2007: 87). 보수적이고 정체된 문화에 근거한 사회적 유대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유대가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체성과 다양성이 보장되고 밀접

제6차 생태사회포럼

한 사회적 연대가 실현되는 도시를 창조하는 것은 곧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문명의 새로운 패턴을 창출하는 것이기도 하다(Bopwood and Mellor, 2007: 80).

위에서 묘사한 도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대, 그리고 인간과 자연생태계 사이의 유대가 공존하는 사회, 즉 공생하는 도시(convivial city)이다(Bopwood and Mellor, 2007: 87). 녹색사회주의의 입장은 분명하다. 공생하는 도시는 실현가능하고 유지 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생하는 도시에서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시민이 된다. 도시는 자본축적과 소비의 공간이 아닌 새롭고 진보적인 문명이 탄생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의 참여예산제는 이러한 새로운 문명이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Bopwood and Mellor, 2007: 87)⁸⁾.

3) 공적 장소(public space)

신자유주의적 추세는 도시 삶을 사유화한다. 공적 공간(public spaces)은 사라져 가고 있다. 도시의 삶이 가지는 고립성과 공식성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양한 결사와 공동체이다. 이러한 결사와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공적 장소들이다. 만나서 대화하고 친교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공적 공간의 상실은 또래 집단과 어울리고 그것을 통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 도덕원리, 즉 타자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청소년들도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빼앗겼다. PC방처럼 상업화된 공간이 아니면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친교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은 사라져 간다(Bopwood and Mellor, 2007: 88).

공적 공간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시의 공원과 녹지다. 자본의 논리와 소비의 논리에 철저히 종속된 도시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공원과 녹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물론 영국의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공원과 녹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국의 도시들에 존재하는 공원과 녹지는 노인, 여성, 어린이, 인종적 소수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등한 접근을 주고 있지 않다(Bopwood and Mellor, 2007: 83). 소득 수준, 계층화된 주거지역, 교통체계, 노동시간패턴 등은 공적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불평등하게 배분한다.⁹⁾

도시 공간을 녹색으로 가꾸는 것은 단지 인문학적 상상력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경제적-문화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도시 공간을 녹색으로 가꾸는 것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스트레스, 소음, 공해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공적 공간의 확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걷기와 자전거 타기에 친숙하도록 한다. 현대인이 고통 받고 있는 비만, 혈관질환, 순환계 질환은 대부분 운동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공적 공간의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도시계획은 이러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공적 공간 안에서 사회적 친교를 확장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럼으로써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Bopwood and Mellor, 2007: 84).¹⁰⁾

공적 공간의 확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기에는 두 개의 단계가 있다. 첫째는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에서 걷기와 자전거 타기의 문화로의 전환이다. 대중교통체계의 정비와 공적 장소의 확장은 이러한 교통문화의 전환에 의해 가능하다(Cahill, 2007: 99). 특히 이러한 교통체계의 전환이 어린이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크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로부터의 전환은 안전한 거리와 놀이공간을 의미하고 이것은 거리에서 놀 권리, 어른의

8) 포르투 알레그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iocchi(2005)를 참고하라.

9) 생태적 시각에서 녹지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권은 인간들 사이의 그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도시에 조성된 녹지는 야생동물 서식지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wildlife corridors)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Bopwood and Mellor, 2007: 84).

10)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성의 소속이 정신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조사에 대해서는 Layard(2005: 68-69)를 참고하라.

제6차 생태사회포럼

도움이 없이 친구 집에 놀러갈 권리,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탈 권리를 어린이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Cahill, 2007: 100, Devine, et al, 2009: 86-91).

힌들리(Jane Hindley)는 런던의 마일 앤드 파크(Mile End Park)의 사례를 통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의 버려진 땅을 지역 주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복원하고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일 앤드 파크의 복원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가능했으며 공적 공간으로서의 공원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 힌들리는 나아가 공원의 조성이 공적 공간을 보존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감정을 불러오는 생태적 교육(ecological pedagogy)의 장이 되었음을 강조한다(Hindley, 2007).

4) 도시와 교통(Cahill)

앞 절에서 도시의 공적 공간 복원에서 교통체계의 전환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전환에 장애물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산업계의 로비다. 자동차 산업계(도로 건설업자를 포함)는 생태적 전환을 원하는 풀뿌리 사회운동과 비교했을 때 월등한 자금력과 정치적 연줄망을 가지고 있다(Cahill, 95). 두 번째는 도시계획 자체의 문제이다. 공공건물은 승용차 접근성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계획된다. 도심외곽에 건설되는 대형소매단지 또한 승용차 이용을 늘어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Cahill, 2007: 91). 세 번째는 정부의 교통정책이다. 1997년 출범한 블레어(Tony Blair)의 신노동당 정부는 지속 가능한 교통계획을 공약했지만 2007년 현재 승인되었거나 건설 중인 도로는 150개에 이른다(Cahill, 2007: 93). 영국의 탄소배출의 28%가 교통수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려할 때(Cahill, 2007: 90), 신노동당 정부가 내세우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허구적일 수밖에 없다¹¹⁾. 자동차 산업계의 로비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¹²⁾ 마지막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게 하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Cahill, 2007: 95). 현재 조건에서 여성이 도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Cahill, 2007: 98).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공적 공간의 확장과 그에 따른 사회적 유대를 높이는 녹색사회주의의 자기적 목표가 성취되지 못한 조건에서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필요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에서 녹색사회주의적 전망은 다양한 실험들에 기초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켄 리빙스톤(Ken Livingstone)에 의해 도입된 혼잡세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Bopwood and Mellor, 2007: 81). 혼잡세의 도입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정책이지만 그것이 대중교통 체제의 정비와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코펜하겐과 같은 유럽 대륙의 도시들의 모범적 사례는 자동차 없는 도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도시계획, 이동경로와 방법의 변화, 자동차 출입을 제한하는 주거지역의 건설 등은 녹색도시가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일 뿐이다(Shah and McIvor, 2006: 47).¹³⁾ 자동차산업, 건설업자, 개발업자, 그리고 나아가 제약

11) 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서 수치상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대처(Margaret Thatcher) 정부 이후로 추진된 석탄 중심에서의 가스중심으로의 에너지 체제 전환과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의 급격한 쇠퇴, 즉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에 의한 것이다. 가스 중심의 에너지 체제가 지속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개인부채 증가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영국의 소비수준을 고려할 때, 수입되는 공산품의 양이 증가하는 추세는 결코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없다(Shah and McIvor, 2006:41-42). 신노동당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대해서는 Devine(2009)를 참고하라.

12) 신노동당 정부의 항공정책은 항공이용 승객이 2003년의 2억 명에서 2030년 4억 7000만 명으로 증가한다는 예측에 맞추어져 있다(Cahill, 2007: 93). 비행기 이용의 증가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를 동반한다.

13) 프란츠 알트(Franz Alt)는 에너지 체제 전환의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산업에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면, 환경과 기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아주 기이한 모순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술 맹신에 젖어 있는 원자력 찬성자들이 에너지 경제를 커다란 규모로 변환한다고 하는 필수불가결하고 시의적절한 과업에 대해서만은 겁에 질린 기술비관주의자가 되는 것이다”(알트, 2004: 94).

제6차 생태사회포럼

회사들과 의료업계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희생될 이유는 없다.

도시 계획은 도시의 정치적, 문화적 시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민권은 포럼, 광장, 공원, 도서관, 극장, 축제 등을 통해 실현된다. 이것은 참여의 공간이자 실천과 수행의 공간이다. 정치적, 문화적 시민권은 도시계획을 통해 유기적으로 창조되어야 하며 그 주 무대는 도시 중심 또는 '도시 속의 마을'(urban villages)이다(Bopwood and Mellor, 2007: 88). 도시가 사회적인 것을 보다 잘 인식하고 시민들의 필요에 반응적이도록 만드는 결연한 노력이 없다면, 도시화는 도시를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는 에토스가 결여된 채 진행 위험이 존재한다. 공생하는 도시는 협의적이고(associational), 집합적인 인간 정신의 구현체가 되어야 한다. 도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적 정치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행동을 위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자치체 사회주의(municipal socialism)가 다양한 사회운동의 성과로부터 얻어진 힘을 결집했듯이 오늘날 부분적 승리와 성취는 다른 도시들의 운동에 영감을 주고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연대 속에서 성장하는 도시의 연대를 상상할 수 있다(Bopwood and Mellor, 2007: 89).¹⁴⁾

3. 농촌사회와 농업, 그리고 소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촌은 근대화 과정에서 희생되었다. 농업의 문제는 국제교역과 식량주권 문제와 결부되어 지원되었지만 그것은 부농과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의료, 학교, 교통, 주택 등 기본적 서비스의 부족과 기업형 농업이 가져온 파괴적 효과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농업'의 문제는 주목받았지만, '농촌'의 문제는 공론의 장에서 사라졌다. 최근에 발생한 역설적 상황은 농촌의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공공 의제에 포함되게 된 이유가 바로 농업의 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 역설적인 것은 농업의 위기가 쟁점이 되는 것은 도시의 소비자로부터의 문제제기에 있었다는 점이다. 새롭게 제기된 농촌사회학의 주제가 주로 식품생산,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인간 정체성에 대한 감정 회복(Dickens, 2000: 150)이었다는 사실은 농촌문제가 농촌 거주자가 아닌 도시인의 관점에서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 농촌에 대한 새로운 관심-농업의 위기

기본적으로 기업형 농업과 공장형 사육에 동반된 제초제, 살충제, 화학 비료, 항생제 등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기계화된 농업은 더 넓은 경작지를 필요로 하고 고른 지표면을 요구한다. 자연적인 풍광은 사라지고 생물타리와 삼림지대는 뿌리 뽑혀지고 습지는 건조한 지역으로 바뀐다. 동시에 기계화된 대규모 농업이 추구하는 효율성은 전문화를 동반한다. 혼합농업(mixed farming)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많은 지역에서 기계화가 진행되며 지속적인 집약농업은 토양을 유지하고 해충을 제거하기 위한 화학약품의 대규모 투입을 촉진한다. 동물사육에서도 성장호르몬, 항생제, 인공적으로 처리된 사료 등이 사용되며 과학-기술적 전문기술이 오래된 농업관행을 대체한다(Benton, 2007: 28). 생산주의적 패러다임(productivist paradigm)이 농업을 지배한 것이다(Sharp, 2007: 104). 생산주의적 패러다임은 식품의 상품화와 이와 결부된 식품문화는 소비와 생산의 장소 사이의 결합을 파괴한다(Sharp, 2007: 105). 생산주의적 패러다임 아래 기계화되고 과학화된 농업은 유전자변형 기술에서 정점에 이른다. 유전자 변형 식품의 상품화와 정부의 안이한 대응, 그리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¹⁵⁾

14) 광역런던시의회(Greater London Council, 1981-6)의 도시계획 정책은 녹색사회주의 원리를 구현하려 시도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Greater London Council (1984)를 보라.

15)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논의는 Benton(2007: 34-35)을 참고하라. 유전자 변형 기술은 양적 극대화라는 포디즘적 농업생산 방식을 지배했던 생산력주의적 패러다임을 넘어서지만 농업과 식품산업의 자본주의적 특징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는 생명과학 통합적 패러다임(life science integrated paradigm)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식품생산은 신기술, 유전자 변형, 생

제6차 생태사회포럼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농촌 사회 전반의 위기문제가 된 것은 광우병과 구제역 발생이 몰고 온 사회적 공황상태였다. 영국정부는 이에 대해 질병의 확산방지라는 전문가적 입장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광우병과 구제역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확산과 더불어 영국 농업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다. 광우병과 구제역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농촌 사회 자체의 위기에 대처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¹⁶⁾ 이러한 계기를 통해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동시에 표출된다. 식품안전성의 위협이 곧 공장형 사육에서 초래된 동물학대로부터 유래한다는 인식은 동물권리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동물권리의 문제는 여우사냥과 같은 유혈스포츠(bloody sports)에 대한 반대 캠페인까지 발전한다. 또한 집약농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유기농이 주목받기 시작한다(Benton, 2007: 31, 20).¹⁷⁾

그러나 다른 한편, 농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농촌 일자리의 감소와 같은 농촌의 계급 쟁점, 적절한 주택의 부족, 농촌 서비스(교통, 학교, 의료 서비스, 마을 상점의 상실)의 쇠퇴 등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Benton, 2007: 20). 이러한 사실은 농업과 농촌의 위기가 도시의 입장에서, 그리고 농촌 사회의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다루어짐으로써 농촌 사회 안의 계급적 갈등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식품생산에 대한 생태주의적으로 통합된 패러다임(ecologically integrated paradigm)은 자연에 대해 전체적이고 통합된 접근, 과학과 연구뿐만 아니라 지방적, 암묵적 지식에 의존하는 식품생산을 강조한다 (Sharp, 2007: 109). 이러한 관점은 농촌 거주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확대하고 그것을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virtuous circle) 관계를 창출하는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2) 농촌 사회의 위기, 계급갈등

현재의 농촌사회 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0세기 중반 농산업의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초점은 농업의 변형이었지만 그것의 결과는 농민들의 경제적 힘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미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이미 잘 조직화되어 있었고 상업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던 농업부문은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이 농업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했다. 더 커진 이윤은 농업생산의 투입, 처리, 마케팅에 있었고 농민은 이윤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거대한 산업적이고 상업적인 부문을 위한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했다.

농업의 현대화는 농업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켰지만 식품의 생산, 처리, 유통에서 농업은 매우 작은 역할을 담당할 뿐이었다(Benton, 2007: 28-29). 경제적 힘은 수평적, 수직적으로 통합과 다원화를 시도한 소수의 거대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의 손에 집중된다. 점점 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대 기업들은 생산에서 처리, 유통,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배한다. 이미 1960년대 다섯 개의 가장 큰 기업이 식사(meal)와 밀가루 시장 80%, 비스킷 시장의 70%, 농축 연유 시장의 90% 이상을, 메말레이드와 잼의 75%를 지배했다(Benton, 2007: 29).

비록 영국이 미국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논평자들은 미국과 같이 영국에서도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트화가 진행되었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업관련산업 기업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알맞은 작물을 적절한 규모로 경작하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경작방법을 기꺼이 수용할 능력이 있었던 농민들을 상업적이고 계약적인 관계를 통해 지배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Benton, 2007: 29-30). 이제 식품안전성이 주

명기술에 의존하며, 건강보조식품(nutraceuticals) 또는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s)이 주목받는다. 식품은 시장을 통해 농장으로부터 직접 가정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종자와 비료 등의 산업적 생산의 투입과정으로부터 시작하는 다양한 처리 과정에 종속된다.(Sharp, 2007: 105-106).

16) 구제역의 대응과정에서 영국 정부의 대응이 농촌사회 전체로 확대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Donaldson, Lowe and Ward(2002)를 참고하라. 이들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의 시각으로부터 구제역 파동을 분석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입장변화는 '농업, 어업, 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에서 '환경, 식품, 농촌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로의 담당부서의 명칭 변경에 잘 나타난다.

17)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동물권리는 대토지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의 특권층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유기농은 거대 기업들의 상업화에 포섭되고 있다.

제6차 생태사회포럼

목받게 되고 농업방식이 일대 전환을 겪게 된 현실에서조차 대기업 지배는 축소되지 않았다. 농업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유기농조차 대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랜 기간 동안 유기농은 광범위한 유기농 원리에 근거한 틈새시장을 차지하고 있었고 원리(principles)와 기준(standards) 사이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유기농이 이윤이 되는 사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후 유기농의 규제에는 많은 구멍들이 생겨났다. 소비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유기농이라는 이름으로 구입한 것이 사실은 그들이 애초에 원했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Rigby and Bown, 2007: 86, 91).¹⁸⁾

유기농으로의 전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농업부문에 발생한 최근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진보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집약적 농업에 주어지던 농업보조가 환경적 관리(environmental stewardship)와 유기농업으로 이동한 것은 단기적으로 자연풍광의 가치와 야생동물 서식지를 어느 정도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경장지가 집약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보아, 식량작물의 산업화된 생산에 이용되던 토지가 축소되는 조건은 지주들로 하여금 그들 토지의 나머지 부분을 보다 많은 이윤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이끌 것이다. 지주들은 이미 이전의 대규모 단작처럼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적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생물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유채가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골프코스, 문화유산 박물관, 사냥, 낚시, 승마 등을 위한 시설로의 변화되고 있다. 물론 이런 시설들은 비싼 이용료를 부과한다. 비농업 전원풍광이 비공식적으로 사림들에게 개방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Benton, 2007, 41-42).

또한 농촌 지역에는 새로운 계급갈등의 양상이 출현했다. 이 갈등은 토지소유자와 도시로부터 농촌으로의 이주자, 그리고 농촌의 토착 노동자들 사이의 계급 갈등이다. 전통적인 농업 공동체와 도시의 중간 계급으로부터 유입되는 귀농집단, 그리고 별장소유자들 사이의 갈등이 생겨난 것이다. 어떤 면에서 모든 편의시설과 기초 서비스의 부족으로 고통 받는 농촌주민들에게 귀농집단은 이익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훨씬 크다. 주택 가격의 상승은 토착농업노동자들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토지소유자들과 귀농자들이 지방행정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과 농촌의 산업적 개발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토지소유자들과 귀농자들은 공공주택 보다는 세를 놓을 수 있는 주택을 원하며 노동자들을 위한 산업적 발전에는 관심이 없다. 저임금에 기초한 농촌경제가 지속되며 이에 따라 농촌빈곤이 심각해진다. 주택사정은 악화되고 기초적인 서비스(주되게는 기초 의료, 학교, 마을의 상점, 대중교통 등)가 상실된다(Benton, 2007: 30-31).

그렇다고 귀농자들이 농촌생활에 만족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목가적 전원생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농촌으로 왔다. 친밀하게 결합된 조화로운 농촌 공동체와 농촌의 한적함, 그리고 자연과의 재접속을 꿈꾸었다. 그러나 목가적인 농촌 공동체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이 열망했던 자연은 이미 정부의 보조에 의한 집약적 농업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다(Benton, 2007: 31). 결론적으로 농촌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변화는 농촌과 농업을 새로운 각도에서 주목하게 했지만 정작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필요와 농촌 빈곤을 무시해 왔고 새로운 계급적 갈등을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Benton, 2007: 42).

4. 정치적 갈등

지금까지 살펴본 영국의 농촌과 농업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 동원의 맥락을 변화시켰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노동당 정부와 농촌연합(Countryside Alliance)이다.

1997년 신노동당정부는 유혈스포츠를 금지하고 보행자들에게 전원지역을 접근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약속했다. 그러나 신노동당 정부는 농촌지역을 변화시킨 중심적 동학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효율적인 농업에 대한 집착이었고 그것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생명기술 영역에 대한 강조이다

18) 영국 유기농산물의 3/4은 환경에 영향을 주는 항공운송에 의해 수입되고 있다(Sharp, 2007: 109-110).

제6차 생태사회포럼

(Benton, 2007: 33). 샤프에 의해서 지적되었듯이 생산력주의적 패러다임이 생명과학 통합적 패러다임으로 옮겨간 것에서 멈추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신노동당 정부의 한계는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이 보수적 입장 우위 하에 표출되도록 했다. 신노동당 정부의 농업정책은 전형적으로 도시엘리트의 그것이었고, 농촌 엘리트와 농업노동자 모두 정부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분명 농촌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농촌 엘리트들은 이것을 도시적 노동당과 농촌이라는 대립을 통해 의미화(signification)한 것이다(Benton, 2007: 33).

앞에서 여러 번 확인된 것처럼 농민들은 수세적인 위치에 처해 있다. 지구화의 압력과 이에 동반되는 정치적, 경제적 위치의 약화는 농민들의 입지를 악화시켜왔다. 이에 반해 신노동당은 도시 중간계급과 관련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였다 (Benton, 2007: 34).

처음에 농민의 경제적, 정치적 힘의 약화는 농민들 스스로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식량체계 변형의 결과였다.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에 기초하고 거대식품 초국적 회사에 하위 파트너로 누리고 있던 기득권 구조가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¹⁹⁾ 이러한 변화는 농촌정책을 수립하는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농촌의 관심을 고조시켰고 여러 가지 캠페인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치적 동맹을 위한 동력과 기회가 만들어졌다. 농촌연합의 형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농민들의 위기의식을 통합하는 농촌연합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부농과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정치적으로 특권적인 지위를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저항하기 위한 후위전투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Benton, 2007: 37).

농촌연합의 보수적이고 엘리트주의적 성격은 이것의 캠페인이 여우사냥이라는 유혈적 스포츠의 방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떻게 소수의 엘리트들의 특권을 상징하는 유혈 스포츠를 통해 도시와 대비되는 농촌의 정체성이 헤게모니화할 수 있었는가? 겉으로 볼 때 여우사냥은 농촌연합 캠페인의 주된 내용이 아니다. 제시된 농촌연합의 정책은 광범위한데, 그것은 농민에 대한 지원과 농촌의 이익을 방어하는 것이다. 농촌연합의 정책 목표는 농촌에서의 새로운 기업, 주택공급,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필수적인 농촌 서비스에 대한 지원,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방적 민주주의, 전원의 아름다움과 야생의 보호 등을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농촌연합은 전원을 여전히 아름답고 다양한 야생생물이 번성하고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이것의 관리자로서의 지주들의 전통적 주장을 강조하면서도 농촌 빈곤과 실업, 살만한 집의 부족, 서비스의 상실 등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러한 계급적 쟁점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농촌연합은 최소한 점점 더 무시되고, 주변화 되고 있는 분노하고 있는 농촌인의 지지를 얻어내고 흡수하려 시도하고 있다. 분명 이러한 전략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헤게모니 전략은 농촌노동자들과 다른 종속적 계급들의 '적극적 동의'(active consent)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무엇보다도 노동당이 수 십 년 동안 농촌의 계급적 쟁점을 무시해왔다는 사실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적 공백이 존재하며 농촌연합을 이 공백을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실천에서 농촌연합은 이러한 광범위한 쟁점들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농촌연합의 웹사이트는 대부분 사냥 문제에 할애되고 있을 뿐이다. 주택, 농촌 서비스, 야생보존, 풍광과 일자리(사냥과 관련된 일자리는 제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동맹이 천명한 정책과 실제 캠페인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Benton, 2007: 37-38). 바로 이 간극이 신노동당의 한계지점이자 녹색사회주의가 주목해야하고 정치적으로 개입해야할 지점이다. 녹색사회주의는 도시와 농촌 내부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 사이의 불균등 발전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녹색사회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불평등과 불균등 발전의 해소 과정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19) 농업위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Kuper(2007)를 참고하라.

5. 지속가능한 도시와 농촌

이제 녹색사회주의가 제시할 수 있는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에 대해 언급할 차례이다. 물론 현실을 극복하는 미래사회의 상은 현실 속에서는 언제나 은폐되거나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때때로 명시적이지 않고 유토피아적으로 보이는 방향설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실천과 상상력 속에서 실현되어 온 것이 인류의 역사였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녹색도시의 공적 공간과 교통체계에 대해서 논의했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도시와 농촌의 공생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북우드와 멜러는 도시 농업과 도시와 주변 농촌지역과 연결을 강조한다(Bopwood and Mellor, 2007: 83). 벤톤에게 이러한 연결은 도시를 녹색으로 가꾸는 동시에 농촌지역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Benton, 2007: 21). 농촌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농촌의 계급갈등은 농촌연합과 같은 보수적 동원전략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기서 발전이 의미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는 상업적 개발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에서 지적했던 농촌거주자들의 기본적 권리와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공적 공간이 중요하다. 녹색사회주의는 도시 또는 반도시적(semi-urban) 개방 공간(open space), 주말농장, 공원, 황무지 등에 대한 공공 소유를 옹호한다. 이런 공간들은 지방적 계획수립과정의 감시, 관리과정에서의 민주적 참여, 무료 접근의 확대 등을 통해 공적 소유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생태적 다양성이 집중되는 공간이며, 도시 인구의 다수를 위한 생활편의시설의 필요가 충족되고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Benton, 2007: 43).

둘째, 농업생산 방식의 변화를 통한 식품안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생산주의적 패러다임의 종식은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과 방향을 열었다. 한편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과 같은 부정적인 방향의 해결책(과학기술 통합적 패러다임)이 힘을 얻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집약적 농업으로부터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물론 릭비(Dan Rigby)와 보운(Sophie Bown)에 의해 논쟁되었듯이 이러한 긍정적 방향은 초국적 기업에 의해 잠식되면서 유기농의 의의가 반감되고 있기도 하다(Rigby and Bown, 2007). 그러나 식품안전성이 쟁점화되고 유기농이 주목받고 있는 현실은 녹색사회주의가 기획하는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식품생산의 투명성을 요구한다. 소비자들은 식품이 생산되는 방식과 환경, 식품평등, 인간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Sharp, 2007: 111). 그들은 현재의 초국적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현재의 식품생산체제가 그들의 요구를 전혀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셋째, 위에서 언급한 '깨달음'은 다양한 대안적 실천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생활협동조합 운동은 그러한 실천들의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대안적 실천들은 녹색사회주의가 기획하는 농촌-도시의 선순환적 연계를 창출할 수 있다. 샤프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녹색사회주의의 대안을 제시한다. 지역 농민으로부터의 공급, 또는 지역의 식품 생산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과의 관계 맺기, 그리고 슬로우푸드(Slow Food) 운동 등이 그것이다. '건강한 교육 트러스트'(Health Education Trust)의 성공적인 캠페인은²⁰⁾ 이러한 운동이 가진 의의를 보여준다(Sharp, 2007: 119, 120).

넷째,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토지 이용계획 또한 중요하다. 도시는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 외부인 출입제한 주택지(gated communities), 사회적 유대를 상실한 고립된 개인들로 이루어진다. 도시 생활은 충분한 운동의 기회를 박탈하고, 범죄에 노출시킨다.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더 많은 감시에 노출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도시 생활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양산한다(Cahill, 101).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우선 상점과 중요시설은 도보와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안전한 거리가 만들어 져야 하고, 각종 서비스, 주택단지, 소매점, 학교,

20) <http://www.healthedtrust.com>

제6차 생태사회포럼

병원 등은 탈 집중화되어야 한다. 카힐(Michael Cahill)은 도시적 쟁점들이 서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통, 보건, 사회적 서비스, 주택 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Cahill, 102). 샤(Hetan Shah)와 맥카이보(Martin McIvor) 또한 생태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터와 쇼핑지구를 도심에 위치시키고 대중교통을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동 거리가 짧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교통을 통제하고 보행자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유럽대륙의 많은 도시들이 이미 이런 조치들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Shah and McIvor, 2006: 47).²¹⁾

위에서 제시한 녹색사회를 향한 방향과 다양한 실험들은 아직 미약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제시와 작은 실험들은 사람들의 능력과 감수성을 변화시킬 것이다. 디킨스는 대안적 실험들이 인간종의 역량(capacities of the human species)을 실현하고 확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Dickens, 161-162). 물론 이러한 작은 실천은 좀 더 넓은 정치적 기획과 정책들을 통해 연결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글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적-록 연구그룹이 1995년에 출간한 팸플릿인 *What on Earth Is to Be Done?*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그룹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드바인(Pat Devine)과 그의 동료들이 공동 저술한 *Feelbad Britain*에도 이들이 말하는 녹색사회주의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그룹이 2년 반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What on Earth Is to Be Done?*의 후속편에는 좀 더 발전된 녹색사회주의의 전망을 제시해주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맑스, 칼/프리드리히 엥겔스,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1권, 박종철출판사
알트, 프란츠 (2004), 『생태적 경제기적』, 양문

- Baiocchi, Gianpaolo (2005), *Militants and Citizens : The Politics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Porto Alegr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Benton, Ted (2007), "The Rural-Urban Division in U.K. Politics", *Capitalism, Nature, Socialism* 18(3): 20-43
- Cahill, Michael (2007), "Why the U-Turn on Sustainable Transport?", *Capitalism, Nature, Socialism* 18(4): 90-103
- Devine, Pat (2009), "Tackling Climate Change", Pat Devine et al eds, *Feelbad Britain*,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Devine, Pat et al (2009), "Feelbad Britain", Pat Devine et al eds, *Feelbad Britain*,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Devine, Pat et al eds (2009), *Feelbad Britain*,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Dickens, Peter, "Society, Space and the Biotic Level: An Urban and Rural Sociology for the New Millenium", *Sociology* 34(1): 147-164
- Donaldson, Andrew et al (2002), "Virus-Crisis-Institutional Change: The Foot and Mouth Actor Network and the Governance of Rural Affairs in the UK", *Sociologia Ruralis* 42(3): 201-214
- Greater London Council (1984), *The Greater London Development Plan: As Proposed to Altered by the Greater London Council*, London: GLC

21) 샤와 맥카이보는 분산된 에너지 체제(decentralised energy system)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알트(2004)도 참고하라.

제6차 생태사회포럼

- Hindley, Jane (2007), "A Part for the 21st Century: Observations on the Transformation of Mile End Park", *Capitalism, Nature, Socialism* 18(4): 104-124
- Hopwood, Bill and Mary Mellor (2007), "Visioning the Sustainable City", *Capitalism, Nature, Socialism* 18(4): 75-89
- Kuper, Richard (2007), "European Agriculture in the Crucible of the WTO", *Capitalism, Nature, Socialism* 18(3): 68-80
- Layard, Richard (2006),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London: Penguin
- Red-Green Study Group (1995), *What on Earth Is to Be Done?*, Manchester: Red-Green Study Group
- Rigby Dan and Sophie Bown (2007), "Whatever Happened to Organic?: Food, Nature and the Market for 'Sustainable' Food", *Capitalism, Nature, Socialism* 18(3): 81-102
- Saunders. Peter (1979), *Urban Politics: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London: Hutchinson
- Shah, Hetan and Martin McIvor(2006), *A New Political Economy*, London: Compass in association with Lawrence and Wishart
- Sharp, Graham (2007), "School Meals in England and the Contradictions of Capital", *Capitalism, Nature, Socialism* 18(3): 103-121

메모 공간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most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taking notes during the forum.